

도덕·윤리과 교육의 학제적 접근의 정착과정*

—도덕·윤리과 중등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이수과목을 중심으로—

정세구 **

I. 서 론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도덕·윤리과는 1973년 제3차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교과 활동에 포함된 이후 21세기 초 오늘날의 제7차 교육과정 시기에 이르기까지 학제적 접근(學際的 接近, Interdisciplinary approach)을 취해왔고,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는 본격적인 학제적 접근의 정착과정으로 진입하였다.

‘학제적 접근’이라는 말의 뜻이 둘 이상의 학문분야가 학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근래에 들어와 도덕·윤리과 교육의 학제적 접근이 정착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도덕·윤리과 교육의 방향 설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고등학교 도덕·윤리과 교육과정 편성이나 교과서 편찬에 그리고 교과담당 교사양성 교육과정 편성 및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본 이수과목 설정에 학제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본 연구에서는 타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 온 중·고등학교 도덕·윤리과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분석은 제외하고, 그 대신 교과담당 교사양성 교육과정이나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본 이수과목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중등학교 도덕·윤리과 교육의 학제적 접근의 특성을 밝혀내려고 하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에 대한 최신 소개에서(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요람, 2004~2005), “본 학과는 한국전통사상과 전통윤리, 윤리학, 정치학(정치이론, 국제정치학, 남북한관계), 사회학(북한사회, 사회사상), 교육학 등 인문·사회과학을 토대로 한 학제적 접근을 통해 국민공동생활의 원리를 탐구하고 그것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한 것을 보아도 교사 양성 교육과정 속에 학제적 특성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동 학과에서는 2005학년도 대학원 석·박사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발전기금으로 이루어졌음.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과정 전공영역을 교과교육학 전공과 교과내용학 전공으로 나누고, 교과내용학 전공을 윤리학, 한국학, 사회과학(정치학 중심), 통일학(북한학 중심) 전공으로 나누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기 증거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간 도덕·윤리과 교육의 학제적 접근이 과거 20여 년간 지나온 정착과정을 밝히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현 시점에서 피상적으로 보면, 또 우리나라 도덕·윤리과 교육이 걸어온 과거에 대해 무관심한 후학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덕·윤리과 교육의 학제적 접근이 당연하게 그리고 저절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도덕·윤리과 교육의 학제적 접근의 구현은 그 과정에서 때로는 적지 않은 난관에 봉착하였고,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교과와 생존과 정체성확립의 계기를 마련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우리의 도덕·윤리교과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후학들에게 선배들이 걸어온 학제적 접근의 발전과 정착을 위한 험난한 길과 각고의 노력을 알려주는 것은 앞으로 닦칠 수도 있는 교과위기에 대처케 하려는 유비무환의 자세확립에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또 그러한 값진 경험을 제대로 후학들에게 전하지 못할 경우 그것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학문적 망각지대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덕·윤리 교과교육 제1세대 학자들이 교과교육의 학제화를 위하여 도덕·윤리교과담당 중등학교 교사양성 교육과정 편성 및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본 이수과목 설정과 관련지어 이룩한 도입, 전개, 정리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3개의 대표적 업적을 지적하고, 각개에 나타난 학제적 접근의 특성과 그에 따른 정착과정을 밝히려 한다.

II. 한국 국민윤리학회 주최 전국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교수세미나(1985.12.12 ~ 12.14)에서 협의 결정된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의 교육과정 편성에 나타난 도덕·윤리과 교육의 학제적 접근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는 1980년과 1981학년도부터 전국 14개의 국·사립 대학교 사범대학에 국민윤리교육과를 새로 설치하고 신입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학과 설치의 배경 중에서 가장 특기할만한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당시의 중·고등학교 도덕과와 국민윤리과 담당교사 양성제도의 파행성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교사양성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중·고등학교 교과활동을 위하여 편성되어 있는 교과는 그 교과를 담당할 교사양성을 전담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과(科)를 지니고 있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유독 중학교 도덕과와 고등학교 국민윤리과의 경우에는 사범대학이나 그외 어떤 대학에서도 담당 교사를 양성하는 전담과를 지니고 있지 못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973~1974년 제3차 교육과정 개정시 중·고등학교에 신생 교과로 등장한 도덕과와 국민윤리과의 경우에는 사범대학과 비사범대학의 유관한 15개 학과에서 소정의 교직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도덕’ 및 ‘윤리’의 교사자격증을 수여해 왔다. 그러나 교사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는 학과 즉 철학 영역의 5개학과(철학과, 동양철학과, 인도철학과, 유학과, 미학과), 종교 영역의 5개학과(신학과, 기독교학과, 불교학과, 성문학과, 종교학과) 그리고 교육·심리영역의 5개학과(교육학과, 심리학과, 교육심리학과, 시청각교육학과, 교도교육과)의 교육과정이 중·고등학교의 도덕 및 국민윤리과의 내용과는 상치되는 점이 적지 않아 교사양성에 문제성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었다(박용현, 1981).

둘째, 당시의 10.26 사태 이후 전개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장기적인 안목의 국가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청소년 정신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었고 또 실제로 많은 정신교육 전문가들이 동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당시의 정부당국은 사회 정화 정책을 통하여 사회적 비리와 폐습을 타파하고 건전한 정신적 풍토를 조성하려고 하였다. 그 일환으로 학교교육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정신교육의 실현이 추구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 뜻있는 인사들, 특히 국민윤리교육연구회(후에 국민윤리학회) 회원들은 국민윤리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사범대학에 국민윤리교육과의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상기한 바 노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80년 6월에 거행된 국민윤리교육연구회 하계세미나에서 발표된 것으로 국민윤리교육의 강화이유로 대한민국을 근대화 된 국가로 만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하고, 국민문화를 창조해야 하며, 또 이념적 분단시대의 통일과 승리의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하여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국민적 정치의식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 등이 강조된 바 있다. 또 정치발전, 민주화, 자유화의 전제가 되는 국민적 합의와 국토통일의 기반을 강제 권력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자유의사에 의하여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정신교육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였다(한승조, 1980).

셋째, 앞에서 지적한 바 2개의 상황이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설치의 여건을 조

성하였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국민윤리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있었던 연세대학교의 이규호교수가 문교부장관직을 맡게 됨으로써 과 탄생의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었다. 당시 이규호 문교부장관은 국민윤리교육연구회 회원 및 국민윤리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행한 한 강연에서 국민윤리교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즉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의 국사, 국어, 미술, 음악, 체육 등을 통해서도 조국에 대한 일체감을 길러주고, 국민으로서의 바른 생활 태도를 가르쳐 줄 수 있겠지만, 이와 동시에 이런 교육을 책임 있게 통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정한 과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이 외에도 국가건설을 위한 국민훈련, 남북한 간의 체제대립을 위한 사상 훈련 등은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닌 교사들만이 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규호, 1980).

이와 같은 독특한 시대적 요구와 배경 하에서 탄생한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에서는 대학 내 여타 과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 구성 방향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국민윤리교육과의 경우에는 그 학문적 배경 및 기초를 이루고 있는 학문 영역이 복합적이고 근본적으로 다양한 학문적 근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영역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취사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더구나 국민윤리교육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에서 설치된 과인 만큼 그 교육과정 구성에서도 어떤 객관적인 타당성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기가 어려웠고 또 외국의 선행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한 예로, 전국 국립대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협의회에서는 1981년에 ‘국민윤리’ 교과담당 교원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개발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박용헌 외, 1981). 동 보고서에서는 국민윤리교육의 목표를 “우리 민족국가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이념과 가치 체계 및 규범 체계 등 국가 생활의 원리를 정립해 가며 이 원리와 일관된 바람직한 국민상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정하고 이 일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윤리교육은 기존의 규범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여러 학문 영역을 포함하는 종합적 성격을 수반하면서 이를 학문 연구를 꿰뚫어 국가생활의 지도 원리를 표출하고 그것을 생활 실체에 구현하고자 하는 종합적 성격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상기한 바와 같이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의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문제점 지적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지만, 1980년과 1981년에 탄생한 신생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에서는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타당한 교육과정 운영에 도달하지 못했고, 과

의 편의와 특히 과소속 교수들의 전공특성에 따라 교사양성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국민윤리학회에서는 박용헌 회장의 주도아래 전국대학국민윤리교육과 교수세미나(1985. 12. 12 ~ 12. 14, 서울소재 아카데미하우스)를 개최하였고, 국민윤리교육과 소속 교수 전원이 회합을 갖고 교사양성 편성 및 개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할 기회를 가졌다.

지나간 과거를 현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앞에서 지적한 교수세미나는 당시 중고등학교 도덕과와 국민윤리과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의 교육과정 편성을 혁신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국민윤리교육과 소속 교수들의 결연한 의지의 발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등학교에 개설된 한 교과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련 사범대학 학과 소속 전국의 교수 전원이 3일 동안이나 회합을 가진 것은 아마도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의 행사라고 논평하지 않을 수 없다.

상기 세미나에서 본 연구자는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의 교육과정 구성”(정세구, 1985)이라는 주제발표를 하였다. 주제 발표 내용 중에는 교육과정 개선 협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서울대, 강원대, 충북대, 공주대, 전북대, 경북대, 부산대, 제주대 국민윤리교육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하였다. 그 외에도 한국국민윤리학회에 의하여 개발된 국민윤리교육과의 모형 교육과정도 제시하였다.

모형교육과정(한승조, 박용헌, 강성위, 이준구, 이병진, 1980)은 그 구성의 원칙에서 국민윤리교육의 목적, 학문적 체계, 중고등학교의 ‘도덕’ ‘국민윤리’교과의 교육내용 등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우리 민족국가의 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이념과 가치체계 및 규범체계 등 국가 생활의 원리를 정립해 가며 이 원리의 일관된 바람직한 국민적 성격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는 국민윤리교육의 일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규범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여러 학문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현재 중고등학교 도덕과와 국민윤리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교과내용이 인간과 가정 및 사회윤리, 한국의 문화와 사상, 정치·경제·사회의 현실과 발전 과제 등을 포함하며, 공산주의 비판과 북한 문제 및 통일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광범위한 내용이 국민윤리과 교육과정에서도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와 함께 도덕과와 국민윤리과를 담당할 교사로서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교과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국민윤리학회가 개발하여 제안한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의 모형 교육과정과 서울대를 비롯한 8개 국립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민윤리교육과의 교육과정을 본 연구자가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종합 분석한 결과를 기초 자

료로 하여, 앞에서 언급한 전국 대학 국민윤리교육과 교수세미나에서는 3일간의 협의를 거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교육과정의 표준안 편성을 완료하였다. 그 과정에서 참여교수들의 전공분야와 관심영역의 차이에 따라 의견 대립과 갈등도 적지 않았으나 협의회주도자(사회자는 경북대의 박인희 교수, 사회보조 및 기록자는 성신여대 방영준 교수와 경상대의 박진환 교수)들의 지혜와 참여교수들의 양보와 타협의 정신에 따라 당면 문제를 해결하였다. 표준안에서 제시된 협의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교사양성과정의 기대되는 성과(expected outcome) 또는 종착점 행동(terminal behaviour)에 해당되는 바람직한 국민윤리교사상(教師像)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가 주제발표에서 제안한 내용, 즉 투철한 국가관, 시국관, 교직관을 지닌 신념 있는 교사, 해박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교양을 지닌 이지와 인간미가 조화를 이룬 교사, 직업인으로서의 탁월한 학습지도능력을 지닌 전문적 교사를 그대로 수용하였다(정세구, 1985).

다음으로, 교과교육과목에 대한 합의내용으로는 교과교육중심과목과 주변과목으로 분류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전자에 속하는 과목으로는 국민윤리교육론, 국민윤리지도법, 국민윤리교재연구를 선정하였다. 후자에 속하는 교과교육주변과목으로는 중심과목의 이론적, 실제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정치교육론, 가치교육론, 도덕교육론, 국민윤리강독을 다룰 것에 합의하였다.

끝으로 교과내용과목에 대한 합의내용으로는 해당과목에 대한 분류영역과 과목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 것이다.

한국사상 및 정치과목으로는 한국민족사연구, 한국사상개론, 한국윤리사상, 민주주의론, 국제정치와 한국, 한국정치론(특강), 국가론, 국제정치체계론, 민족주의론, 한국 근대화론, 국제갈등과 평화, 제3세계정치론, 정치사상을 선정하였다.

윤리 및 사회사상과목으로는 문화와 윤리, (현대)윤리학개론, 사회윤리연구, 사회사상사, 동양윤리사상, 사회철학특강, 한국경제체제론, 정치사회학개론, 사회과학방법론, 사회복지론, 한국사회론, 현대사회문제론, 현대이데올로기문제, 서양윤리사상, 경제사상사, 인간학을 선정하였다.(인격론, 사회학개론 등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기로 하였음)

공산주의비판 및 북한문제과목으로는 공산주의이론과 실제, 아세아공산주의론, 공산주의운동사, 공산주의체제비교, 북한정치론, 북한사회론, 공산주의전략전술,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 현대급진사상이 선정되었다.

상기과목 중에서 필수과목으로 선정된 것은...

교과교육과목에 국민윤리교육론, 국민윤리지도법, 국민윤리교재연구, 국민윤리학 강독 교과내용과목 1의 한국사상 및 정치과목에 한국윤리사상, 민주주의론, 한국정치론

교과내용과목 2의 윤리 및 사회사상과목에 윤리학개론

교과내용과목 3의 공산주의비판 및 북한문제과목에 공산주의이론과 실제, 북한정치론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은 전국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교수세미나에서 협의 결
정된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의 교육과정 편성에서 나타난 학제적 접근의 특성은
교과내용과목의 3분법에서 밝혀지고 있다. 한국사상 및 정치과목, 윤리 및 사회사상
과목, 공산주의비판 및 북한문제과목은 교사들에게 요청되는 윤리적 인식체계와 이념
적 시각을 정립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를 거의 다 망라하고 있었다. 한국전통사상 및
윤리와 정치학, 윤리학과 사회학 및 경제학은 각 내용영역과목이 인문학과 사회과학
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고, 공산주의비판 및 북한문제는 이념적 대결상태에 있는 북한
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둔 것이었다.

결론지어 말하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전국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
과 교수세미나는 교과교육과 교과내용과목간의 조화를 이룬, 그리고 교과내용과목의
경우에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기본으로 하고 한국적인 특수한 이념문제가 추가된
비교적 균형 잡힌 수준의 학제적 특성을 지닌 도덕·윤리교과담당 교사양성 교육과
정을 편성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도덕·윤리교육에의 학제적 접근의 차원에서
보면, 도입단계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규명 및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교육부가 1994년에 고시한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표시과목의 대학관련학과 및 기본이수영역(과목) 중 『윤리』의 기본이수과목(교육부고시 제 1994-7호)에 나타난 도덕·윤리과 교육의 학제적 접근

앞에서 다룬 1985년에 개최된 전국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교수세미나 이후 교수
들 간에 협의 결정한 교육과정 편성 원칙에 따라, 또 도덕·윤리과 교육의 학제적 접
근 원칙에 따라 교사교육을 추진하고 있었던 1980년대 후반과 1990년 초에 이와 같
은 지향방향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사건이 관련 학과나 소속 교수들과의 일체 사전
협의 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였다. 그것은 1992년 3월 10일 교육부가 중등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국민윤리」 교과와 기본이수과목으로 윤리학, 공산주의비판, 철학, 논
리학의 4과목을 개정하여 고시한 것이다.(교육부고시 제1992-7호)

이와 같은 결정은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일단 표시과목
의 대학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본 이수과목 또는 분야가 고시되면 교원양성기관

에서는 이를 필수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개정 고시된 규정을 따르다면, 관련 교사양성기관인 전국국민윤리교육과에서는 윤리학, 철학, 논리학의 철학 과목 3개와 공산주의비판과목 1개만을 필수로 이수한 교사들을 양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는 도덕·윤리과교육의 학제적 접근 자체를 거부하고,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국민윤리교육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었다.

이를 목인할 수 없었던, 도덕·윤리과 교육을 대표하는 신생 학술단체인 한국도덕국민윤리과교육학회(1990년 1월 1일 창립)에서는 기본이수과목 시정요청을 위한 탄원서를 교육부장관(참조 교직국장, 양성과장) 앞으로 2회(1992.9.16과 1993.4.2.)에 걸쳐 제출하였고 회원들이 여러 차례 직접 방문 항의하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였다. 항의한 내용의 핵심은 고시된 4개의 기본 이수과목 즉, 윤리학, 공산주의비판, 철학, 논리학이 지닌 타당성의 결여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 것이었다.

첫째, 중등학교 도덕과, 윤리과 교과성격과의 불일치를 지적하였다. 중학교 도덕과와 고등학교 윤리과는 한국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도덕·윤리를 가르치는 실천을 위한 교과이며 순수한 철학이나 윤리학을 가르치는 교과가 아니다. 철학·윤리학·논리학으로 연결되는 서양철학 위주의 과목 선정은 도덕과, 윤리과의 규범과학적, 사회과학적 접근을 포괄하는 학제적 접근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중등학교 도덕과, 윤리과 내용과의 불일치를 지적하였다. ‘국민윤리’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이수과목은 도덕과, 윤리과 내용의 학문적 기초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전문적 지식을 보완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철학과 윤리학은 그 자체가 중복되는 면을 지닌데다 (윤리학은 철학의 한 분야) 둘 다 교과의 지도내용과는 일치되는 면이 매우 적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철학의 하위 영역인 논리학조차도 독립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극단적인 편협함을 노출시키는 것이었다. 특히 공산주의 비판은 냉전시대의 종언과 함께 중요성이 약화되어 새교육과정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으로, 중학교의 공산주의이념과 체제의 내용, 고등학교 이데올로기 단원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

셋째, 교과지도에 필수적인 교과교육과목 배제 상태를 지적하였다. 사범대학의 모든 교과교육전공학과에는 ○○과 교육론·지도법·교재연구의 3개의 교과교육과목이 필수로 개설되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단계로 ○○과 연구방법이나 ○○과 평가방법 까지도 필수과목으로 개설될 계획에 있었다. 고시된 기본이수과목 가운데 교과지도에 필수적인 교과교육과목을 배제한 것은 사범대학의 기본 성격을 무시한 처사였다. 국민윤리(도덕)의 기본 이수과목에 국민윤리교육론(이론중심), 국민윤리지도법(실제

중심)이 제외되고 교과내용중심과목만으로 기본 이수과목을 정한 것은 교과지도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지식내용전달 위주의 과목 편성을 한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고시된 4개의 기본 이수과목의 타당성 결여를 지적한 것 이외에도 탄원서에서는 고시된 4개의 과목의 시정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다.

첫째, 기본 이수과목의 재고시였다. 기본 이수과목을 빠른 시일 내에 수정·보완하여 재고시하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선 고시된 과목의 시행보류를 전국 대학 관련학과(국민윤리교육과, 국민윤리학과)에 시달할 것을 요망하였다.

둘째, 추후의 이수과목 선정을 위해서는 일부 학문분야 전공학자들과의 협의 및 자문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한국도덕국민윤리과교육학회, 한국국민윤리학회 혹은 전국국·사립 사대 국민윤리교육과 학과장회와 같은 학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에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셋째, 앞으로의 기본이수과목선정을 위해서는 기존의 권위 있는 사례에 대한 참고를 요망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국민윤리학회 주최 전국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교수세미나(1985.12)에서 제안했던 교과교육과목(국민윤리교육론, 국민윤리지도법, 국민윤리교재연구)과 교과내용과목(한국사상 및 정치과목, 윤리 및 사회사상과목, 공산주의비판 및 북한통일문제과목)과 같은 것이었다.

또 다른 사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에서 결정한 것으로(1992.6) 한국사상, 윤리학, 민주주의론, 북한 및 통일문제, 도덕·(국민)윤리과교육론, 도덕(국민)윤리과 지도법이었다.

상기한 바와 같은 탄원서를 2차례나 교육부에 제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교육부 행정담당자가 저지른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직접 공식적인 해명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로부터 유출된 풍문에 따르면, 교육부가 고시하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담당관이 자문의 대상으로 교과교육의 주도세력인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소속 교수들을 배제하고 제한된 수의 졸업생에게만 교사자격증을 줄 수 있는 국민윤리학과를 선택하였고, 어떤 한 국민윤리학과에 위촉하여 기본 이수과목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실수가 저질러졌다고 하였다.

탄원서를 제출했던 한국도덕국민윤리과교육학회에서는 1993년 4월 13일자로 교육부로부터 기본이수영역(과목)을 개정·고시할 것이라는 답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도덕국민윤리과교육학회에서는 학회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국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학과장들에게 1993년 4월 19일자로 공문을 보내어 각 학과별로 기본 이수영역(과목)을 결정한 후 학회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각 학과들이 제출한 안을

본 연구자를 중심으로 종합 정리하여 학회에서는 기본이수과목에 관한 건의를 하였다.

그 후 교육부는 종래의 규정과는 파격적으로 다르게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92년에 고시했던 기본이수과목을 2년만에 파기하고 1994년에 중등학교 교사를 위한 표시과목의 대학 관련학과 및 기본 이수영역 또는 과목을 새로 고시하였다. 「윤리」 과목의 기본이수과목으로 한국도덕국민윤리과교육학회가 제안한 한국윤리사상, 윤리학개론, 민주주의론, 통일교육의 4과목을 선정 고시하였다.

이와 같은 교과 기본 이수과목의 개정고시는 단순한 이수과목의 개정이라기보다는 도덕·윤리교과의 성격 자체를 확인하고 교과제의 모습을 정립하였다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이었다. 물론 이에 대해 한국철학회, 전국대학철학학과장협의회를 비롯한 철학관련 단체들이 적극 반대여사를 표명했고 1994년 4~6월 사이에 교육부에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에도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기본이수과목으로 윤리학, 인식론, 논리학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새로 고시된 이수과목인 윤리학개론, 한국윤리사상, 민주주의론, 북한학(통일교육)은 이념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도덕국민윤리과교육학회에서는 1994년 6월 7일에 교육부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교육부가 개정 고시한 4개의 기본 이수과목선정은 매우 타당한 결정이라고 지지여사를 밝혔다. 그리고 그 이유는 중등학교에서 순수한 윤리학이나 철학의 학문적 내용을 가르치기 보다는 한국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하였다. 철학자들이 기본이수과목으로 요청하는 윤리학·인식론·논리학 등은 서양학문에 뿌리를 둔 것으로서 서구적인 합리적 사고방식을 갖게 하는 데는 필요하겠으나, 한국인으로서의 바람직한 도덕·윤리의식을 갖게 하는 데는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아무리 막으려 해도 서구화로 치닫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거의 유일하게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한 교과목인 '도덕' '윤리'마저 그러한 방향으로 내주어서 안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학계의 의견대립 상황 속에서 교육부 사회과학 편수관실의 도덕·윤리담당 이창조 편수관은 철학계의 이수과목에 대한 항의성 민원에 대해 1994년 7월 6일에 분명한 의견통보를 하였다. 즉, 도덕·윤리교과는 철학이나 윤리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도덕·윤리교과를 지도하기 위한 윤리교육학은 이미 철학의 한 분과를 떠나서 윤리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등과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통합되는 학제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점차 그 학문적 체계를 정립해 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 고시된 기본이수과목에 대한 논쟁

은 종식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하겠다.

그 후 몇 년 후인 1998년에 본 연구자는 교육부가 1994년에 고시한 4개의 기본이수과목, 즉 한국윤리사상, 윤리학개론, 민주주의론, 통일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정당화를 마련키 위하여, 또 2000년에 개정고시 예정인 도덕·윤리의 기본 이수과목의 개정 방향을 탐색하고 제안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과정학회에서 “중등학교 ‘윤리’과목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학 관련학과 확대와 기본 이수과목 개정방향”(정세구, 1998)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상기 논문에서는 교육부가 고시한 4개 이수과목의 특성을 다음과 같은 도표를 통하여 풀이하였다.

이수과목	특성	중점목적	중점목표	중점학문 영역	
한국윤리사상 윤리학개론		개인적 요구 충족	윤리적 인식체계확립	인문학	한국학
					윤리학
민주주의론 통일교육		국가사회적 요구 충족	이념적 시각 확립	사회과학	정치학
					북한학

상기 도표에서 나타난 4개 이수과목의 근거 또는 정당화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이수과목의 중점 목적으로 개인적 요구와 국가·사회적 요구의 충족을 내세웠다. 이수과목 중에서 한국윤리사상과 윤리학개론은 주로 개인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과목이고 민주주의론과 통일교육은 주로 국가·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엄밀하게 이분법적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목적에 비중을 둔다는 뜻이다.

이러한 중점 목적에 따른 정당화는 좀 오래전의 것이긴 하지만 80년대 초반에 미국·영국·소련·일본·한국 등의 세계 10여 개국으로부터 본 연구자를 포함하는 20여명의 학자들이 유네스코에 모여 세계 각국의 상호이해를 위하여 공통으로 사용할 한 핸드북(Howard Mehlinger & Sae-gu Chung, 1981)을 집필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도덕·윤리교육을 포함하는 세계의 국제이해교육 목적 분류에서, 개인적 삶의 보람과 생존에 보탬이 되는 교육, 젊은 사회구성원들을 사회 안에 이끌어 들이고 민주 국가 내지 민주 사회구성원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교육, 그리고 학문 분야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사회지식을 알게 하는 교육으로 3분법적 접근을 한 바 있다. 이러한 목적분류 중에서 앞의 2개의 목적을 여기에서 인용한 것이므로 또 최근에도 상기분류법은 큰 문제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할 때 그 타당성은 광범하게 인

정될 수 있는 것이었다.

물론, 이수파목의 중점목표로 윤리적 인식체계와 이념적 시각의 확립을 내세운 것이 다. 이수파목 중에서 한국윤리사상과 윤리개론은 주로 윤리적 인식체계 확립에 관련 이 있고, 민주주의론과 통일교육은 이념적 시각을 확립하는 데 관련이 있었다.

도덕·윤리교과의 목표가 바로 한국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삶, 용무를 삶에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적인 윤리적 인식체계를 확립시켜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핵심에는 당연히 우리의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이 땅위에 일궈놓은 바람직한 삶의 모습과 인간관계에 관한 전통사상, 전통윤리가 그곳에 들어 있어야 할 것이고, 동시에 현대 사회의 구성원 개개인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가치판단, 윤리적 판단의 능력도 필요할 것이다.

도덕·윤리교과의 또 다른 목표는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신념과 민주사회적 능력을 지니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민족의 염원이며 당면과제인 남북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국가 실현의지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함께 통일을 달성하는데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전제조건에서부터 통일 이후에 우리가 이룩해야 할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지적 근거를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수파목의 중점 학문영역으로 인문학(한국학, 윤리학)과 사회과학(정치학, 북한학)을 내세웠다. 한국윤리사상과 윤리개론의 파목은 주로 인문학탐구에 그 근거를 두 고 있고, 민주주의론과 통일교육의 파목은 주로 사회과학탐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한국윤리사상과 윤리학의 탐구는 앞에서 지적한 윤리적 인식체계 확립과 관련된 것 으로 우리의 전통윤리의 핵심을 이루는 무속신앙과 단군사회에서 비롯된 홍익인간과 경천애인에서부터 불교와 유교에서 규범체제로 제시하는 사성제, 팔경도나 오륜, 사덕 등 을 포함하고, 우리나라의 성리학과 실학사상에서 강조하는 인륜의 연구가 해당된다. 동 시에 서구의 학문적 전통으로부터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도덕규범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윤리학과 도덕철학 그리고 가치학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한국학이나 윤리학적 탐구 는 바로 인문학의 한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통일문제에 대한 탐구는 앞에서 지적한 이념적 시각 확립과 관련되는 것 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기초이론에 해당되는 정치학의 체계론속이론, 정치사회이론, 사회학의 공동체이론 및 일반적이론 이데올로기론에서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의 내용이 나 기음을 포함한다. 동시에 통일교육에 대한 학문적 근거도 사회과학탐구를 통하여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치학이나 북한학적 탐구는 사회과학의 한

중요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부가 1994년에 고시한 「윤리」를 위한 기본 이수과목은 인문학과 그에 속하는 한국학과 윤리학, 그리고 사회과학과 그에 속하는 정치학과 북한학으로 구분되는 중점학문 영역에서 균형 잡힌 학제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한국윤리사상과 윤리학개론의 인문학에 속하는 2과목과 민주주의론과 통일교육의 사회과학에 속하는 2과목이 각각 보편적인 한 학문영역과 한국적인 특수한 한 하위학문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과목 선정의 균형성을 가일층 제고시킨 것이라고 평할 수 있겠다.

결론지어 말하면 교육부는 1994년에 「윤리」의 기본이수과목을 매우 타당하게 고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중등학교 도덕·윤리과 교육을 성공적인 학제적 접근 속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도덕·윤리교육의 학제적 접근의 차원에서 보면, 1985년 국민윤리교육과 교수세미나의 도입단계를 뒤이은 전개단계에 해당되는 업적이라고 규명 및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IV. 교육부가 2000년에 고시한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취득을 위한 표시과목의 대학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중 『도덕·윤리』의 기본 이수과목(교육부고시 제2000-1호)에 나타난 도덕·윤리과 교육의 학제적 접근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94년에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표시과목의 대학 관련학과 및 기본이수영역(과목)의 개정과 함께 우리나라 도덕·윤리과 교육의 학제적 접근은 또 하나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새천년에 대비한 교육개혁의 물결과 함께, 다시 표시과목의 대학 관련학과 및 기본 이수영역(과목)에 대한 개정 고시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배경과 요인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당시 1997년에 개정 고시될 예정인 제7차 교육과정의 설계를 위하여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한 연구보고서(교육개혁위원회, 1995.5.31)에 따르면 신교육체제의 목표로서 열린 교육체제를 제시하였고, “열린교육체제 속에서 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 내에서의 프로그램 및 전공간의 이동을 쉽게 하여, 누구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초·중등교육에서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와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개인의 학습 능력 차이를 고려한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른다면, 1994년에 개정 고시된 4개의 기본 이수과목 즉 한국윤리 사상, 윤리학개론, 민주주의론, 통일교육의 4과목을 필수로 선택하게 하는, 따라서 선택 과목 학습을 지도할 교사에게조차 과목 선택의 재량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당시의 과목이수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1997년에 개정 고시될 예정인 제7차 교육과정 초·중·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연구를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은 본 연구자는 1997년도 연구과제 답신보고서(정세구, 1997)에서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으로 행동실천을 위한 인성교육의 강화를 무엇보다 먼저 내세웠다. 도덕과 교육이 학생들의 도덕적 행동 실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교과와 정체성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도덕과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주장은 동 교육이 학생들의 도덕적 실천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또 도덕과 교육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 교육이 학생들에게 도덕적 지식은 제공하면서도 도덕적 행동의 실천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도덕과 교육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주장 속에서 1986년에 우리나라의 학부모, 교사, 교육행정가들이 학생들의 장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교과가 무엇인가에 대해 모든 교과 중에서 도덕과를 2위로 지정한 것은(1위는 영어, 3위는 국어)(김기석 외, 1996) 도덕과가 바로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과 도덕적 행동 실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반면에 1995년에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틀을 구성할 당시에 학교 교육과정에서 도덕·윤리교과를 배제하려고 한 근거는 현행 도덕·윤리교육이 지식 중심에 치우쳐 행동의 실천에는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안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정의 중점을 두고 추진된 초·중·고 도덕과 교육과정이 1997년에 개정 고시된 상황 하에서, 도덕과 수업을 이끌어 갈 예비교사인 사범대학(국민)윤리교육과 학생들이 지식위주의 교과내용과목만을 기본이수과목으로 택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따라서 행동실천을 위한 제구성요소를 적절하게 다루는 도덕·윤리교과교육과목의 이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이 2000년으로 예정된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취득을 위한 표시과목의 개정 고시를 앞두고 요청된 새 원칙은 과목 선택의 재량권 부여와 교과교육과목의 개설이었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는 새로운 개정고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앞에서 지적한 바 1998년의 한국교육과정학회 발표논문(정세구, 1998)에서 하나의 시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 바 있다. 그 시안에서 제안한 이수영역(과목)은 (1)도덕·윤리과교육론, 도덕·윤리과지도 및 평가론, 도덕·윤리교재 및 교과교육연구론, (2)한국사상개론, 동양사

상개론, 동서양고전감독, 윤리학개론, (3)민주주의론(또는 민주시민교육론), 국가안보론, 통일교육론, 인성교육 및 상담이론과 실제였다.

상기 시안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이수영역(과목)을 1개의 교과교육과목영역과 2개의 교과내용과목영역으로 3분한 것이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 2개 과목씩을 선택하게 하여 6과목 이상을 이수하게 한 것이었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과목 선택의 재량권 부여와 교과교육과목의 개설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이었다. 특히, 교과내용과목영역을 (2)와 (3)의 2개의 영역으로 분류한 것은 과목 선택이 어떤 한 영역, 즉 인문학, 혹은 사회과학에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까지 개관한 바와 같은 「도덕·윤리」의 기본 이수과목의 개정고시를 요청한 제반 분위기와 여건 속에서 또 구체적인 개정의 원칙과 대안적인 시안이 제시된 상황에서 교육부는 2000년 1월 28일에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표시과목의 대학 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중 「도덕·윤리」 과목의 기본 이수과목으로 다음 과목들을 지정 고시하였다. 즉, (1)도덕·윤리교육론, (2)윤리학개론, 동양 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 한국사상개론, 윤리고전강독(또는 동서양고전강독, 또는 논술), (3)민주주의론, 국가안보론, 통일교육론, 시민교육론, 도덕(발달)심리학이었다. 이 중에서 (1)분야에서 필수 1과목(2학점이상), (2)(3)분야에서 각각 선택 2과목(6학점이상) 합하여 5과목(14학점)이상을 이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2000년에 고시된 「도덕·윤리」의 기본 이수과목은 1994년에 고시된 종전의 기본 이수과목과는 외형상의 차이점을 나타내었다. 과목명 비교를 하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우선 교과내용과목 4개를 필수로 지정했던 상태에서 교과교육과목 1개를 포함하는 5개 과목을 11개 과목 중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변경시킨 것이다. 교과교육 1과목은 필수로 하고 교과내용과목을 2분야에서 각각 5과목 중 2과목 이상씩을 선택하여 이수하게 하였다.

물론 상기한 바와 같은 과목수의 증가와 선택제도의 적용은 큰 변화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실제로 지정된 과목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1994년과 2000년 사이의 이수과목 간에는 성격상의 차이가 현격하다고 단정내릴 수는 없다. 특히, 인문학과 사회과학 별로 2과목씩 지정되었던 것이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2개 분야별로 2과목씩을 선택하게 한 것은 종전의 교과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더구나 지정된 과목도 도덕(발달)심리학과 같이 교육학적 과목이 새로 개설된 것 외에는 유사한 과목이 대부분이었다.

결론지어 말하면, 교육부에 의하여 2000년에 고시된 「도덕·윤리」 표시과목의 기본 이수과목은 과목 영역을 3분하여 교과교육영역 1개와 교과내용영역 2개를 신설하고 과

목 선택을 하게 하는 등의 실제적인 개정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학제적 접근의 시각에서 보면, 1994년에 고시된 기본이수과목이 인문학에 속하는 2과목과 사회과학에 속하는 2과목을 필수로 지정했고, 2000년의 개정안에서도 실제로 인문학, 사회과학별 2과목씩을 선택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두 시기간의 큰 차이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2000년의 표시과목고시는 1994년에 고시된 내용을 발전시켜 학제적 특성을 살린 것으로 정리단계에 해당되는 완결성을 지닌 업적이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2000년에 고시된 내용에 대한 평가를 마치면서 한가지 빼어 놓을 수 없는 것은 그 과정에서 몇몇 관련 인사들이 우리 도덕·윤리교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먼저, 교육부의 위촉을 받아 '교원자격증표시과목 및 이수영역개선 정책연구'(1998년)의 연구책임을 맡았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의 소광섭 교수가 도덕·윤리교과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고, 특히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의 도덕·윤리 담당 이우용 편수관은 도덕·윤리 교과교육의 이상을 구현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지금까지 교육부가 2000년에 고시한 도덕·윤리과목의 기본이수과목이 도덕·윤리교과교육의 학제적 접근의 정착과정에서 어떤 업적을 거두었는가를 밝혔다. 다음은 본 연구의 주제인 「도덕·윤리교과 교육의 학제적 접근과정」에 대해 기본 이수과목처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수과목과 함께 관련이 되는 '표시과목명'과 '관련학과'에 대해서도 몇가지 관련 사항을 밝히려 한다.

먼저, 표시과목명에 대해서보면 1994년에 「윤리」로 고시된 것이 2000년에 「도덕·윤리」로 개정 고시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이유를 밝히면, 1997년에 고시되어 시행되기 시작한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도덕」이라는 교과명을 사용하였지만, 고등학교 2,3학년을 위한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시민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의 3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3과목이 모두 '윤리'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윤리」라는 복합 교과명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그렇게 한 것이다.

다음으로 관련학과에 대해서보면, 1994년에 '국민윤리교육과'와 '국민윤리학과'로 고시된 것이 2000년에는 「(국민)윤리교육, 철학, 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로 개정 고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싶은 것은 2000년에 고시된 표시과목의 대학 관련학부(전공·학과)에 관한 1999년경의 입법예고와 관련지어 (국민)윤리교육과 소속교수들 사이에 의견 충돌과 대립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국민)윤리교육과 일부 교수들이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관련학과에 (국민)윤리교육과에다 교육학과와 철학과를 추가

포함시키려는 것에 대해 교육부에 항의도 했고 전국의 (국민) 윤리교육과 학생들이 정부종합청사주변에 집결하여 반대집회를 갖기도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1999년 9월경에 주로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강원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교수들이 철학과와 교육학과를 관련학과에 포함시키는 것이 도덕·윤리교육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자 외 몇몇 교수들은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철학과와 교육학과를 포함시키는 것을 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실무진에게 건의했고, 또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두개의 대표적인 찬성이유를 제시한 사신(私信)을 법령이 개정고시되기 이전인 1999년 9월 17일에 전국 국·사립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의 교수 전원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에서 발송하였다.

첫째, 대학의 관련 학부(전공·학과)에 철학과와 교육학과를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개방체제로 인하여 어떤 일정한 관련 학과만이 어떤 교사자격증을 독점적으로 받는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994년에 고시한 법령에서는 표시과목 ‘윤리’의 대학의 관련학과가 국민윤리교육과와 국민윤리학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1999년에 입법 예고한 개정고시안에서는 모든 표시과목의 관련학부(전공)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가 개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학과라도 관련학과가 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개방정책의 특징이었다. 따라서 (국민)윤리교육과도 하나의 관련학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도덕·윤리」 과목이 자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타 학과가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무리이며 사태파악을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 아직도 우리 도덕·윤리교과가 당면한 위기 상황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닥칠 교과존폐의 기로에서 우리 교과가 어떤 위치에 처하게 될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수들이 적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뒤돌아 보면, 교육과정의 개정이 있을 때마다 교과간의 생존을 위한 대결과 투쟁은 약육강식의 동물왕국보다 더 치열한 경우가 적지 않았고, 앞으로 교과목 축소 추세속에서 교과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여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을 찾아내고 그들과 공동방위를 하는 것인데, 초·중·고등학교 교과편제를 결정하는데 누가 영향력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들과 한 배에 타는 것과 종전과 같이 대립 또는 갈등관계에 있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깊이 생각해 보자고 하였다.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임을 천명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도덕·윤리과 교육담당 교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기본 이수과목의 편성을 중심으로 도덕·윤리과 교육의 학제적 접근의 정착 과정을 밝힌 것이다.

1980, 1981학년도부터 사범대학에 국민윤리교육과가 개설된 이래 교사 양성 교육과정 및 기본 이수과목의 성격 규명과 그에 따른 편성 문제로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의 주축을 이루는 교수들은 한국학, 윤리학, 사회과학, 북한학 등을 기본이수과목의 중점 학문영역으로 선정함으로써 학제적 접근을 택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철학과 교수들은 학제적 접근 자체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면서 철학, 윤리학, 논리학 중심의 단일 학문적 접근을 시종일관 주장해 왔다.

이와 같은 대결 및 갈등과정에서 국민윤리교육과가 지향하는 학제적 접근이 더 타당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지나온 20여년은 바로 도덕·윤리과 교육의 학제적 접근의 정착과정이라고 평할 수도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한 3개의 업적, 즉 1985년의 전국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교수세미나, 1994년 교육부의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윤리」의 기본 이수과목 고시, 2000년 교육부의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도덕·윤리」의 기본 이수과목 고시가 도덕·윤리과 교육의 학제적 접근의 정착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밝히려는 것이었다.

1985년의 교수세미나는 신생 국민윤리교육과 교수들이 처음으로 중등학교 도덕·윤리과 교육과 관련지어 교과교육과 교과내용과의 조화, 그리고 교과내용의 경우에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한국적 이념 문제가 가미된 학제적 특성을 지닌 교사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그 도입을 실현한 것이다.

1994년 교육부의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윤리」의 기본 이수과목고시는 한국윤리사상, 윤리학개론, 민주주의론, 통일교육의 4과목 선정과 함께 도덕·윤리 교과 및 교과 담당 교사를 양성하는 국민윤리교육과의 성격을 인문학과 그에 속하는 한국학과 윤리학, 그리고 사회과학과 그에 속하는 정치학과 북한학으로 규명함으로써 체계적인 학제적 전개를 이룩한 것이다.

2000년 교육부의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도덕·윤리」의 기본이수과목 고시는 교과교육과목으로 도덕·윤리교육론의 필수 1과목, 교과내용과목으로 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 한국사상개론, 윤리고전강독 중에서 2과목 이상 선택, 그리고 민주주의론, 국가안보론, 통일교육론, 시민교육론, 도덕심리학 중에서 2과목 이상을 선택케 함으로써 처음으로 과목선택제도의 적용은 물론 교과교육과목과 교과내용과

목, 그리고 교과내용의 경우에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영역과목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학제적 접근의 정리단계에 도달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결론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도덕·윤리과 교육 담당 중등교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이수과목의 개선과 학제적 접근의 진일보를 위한 두개의 간략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언은 이제까지 도덕·윤리과 교육의 학제적 접근을 주도해 온 교수나 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것인데, 지나온 20여 년 동안 중등학교 도덕·윤리과 교육의 학제적 접근이 단계적인 정착과정을 거쳤지만 아직도 많은 취약점을 지니고 있어, 교과 자체는 물론 교과담당 교사양성기관인 사범대학(국민)윤리교육과의 정체성 확립에도 가일층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최근에 개최된 한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방식의 개선방안을 다루는 세미나에서 도덕·윤리과 교육이 앞으로 전개될 정보사회에 대비하여 행동실천과 감성교육을 중시하는 통합적 인격교육에 더 역점을 둘 것을 강조한 바 있다.(정세구, 2003)

둘째 제언은 이제까지 도덕·윤리과 교육의 철학중심의 단일학문 접근법을 주장해 온 교수나 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 한국의 도덕 윤리문제는 이제 서양 학문에 뿌리를 둔 윤리학, 논리학 등의 단일 학문적 접근법으로는 해석할 수도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도 없는 학문적인 복잡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통합적인 학제적 탐구의 대열에 참여해 달라라는 것이다. 비교적 최근인 몇 년 전에 철학자들의 의견을 대변한 한 ‘생각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도덕교육에서는 비판적 사고성향과 능력을 주로 기를 것을 강조하였다. (김광수, 2001) 그러나 이러한 학적 주장은 비판적 사고능력의 향상이 도덕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민감성, 공감, 친사회적 행동과 같이 인간 기능의 다른 부분들이 도덕성 영역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수용하면서 도덕성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지향해야 할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앞에서 지적한 철학자들의 연구에 관한 논평회(2002년 1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철학·교육학계의 대원로들이 피력한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연구보고서 부록에 기록된 바와 같이 도덕교육에서 지나치게 지적인 면을 강조해서는 안 되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통합적 도덕교육을 지향하여야 하고(김태길), 도덕교육은 인격체 전반을 대상으로 해서 인격을 관리하게 하는 것인데, 메마른 논리교육만으로는 부족하며, 도덕적 심성이 사고교육을 통해 길러질까 의문이라고 하였다.(이돈희)

참 고 문 헌

- 김광수(2001),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육성을 위한 ‘생각하는 교육’의 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김기석 외(1996),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요구조사」,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1996.8.
-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1995)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제2차 대통령 보고서, 1995. 5. 31.
- 박용현(1981), 「한국정신교육의 실태와 개선책」, 사회정화위원회.
- 박용현 외(1981), 「국민윤리교육과 교육과정 개요 및 교수요강」
- 이규호(1980), “국민윤리교육의 중요성”, 국민윤리교육세미나 발표.
- 정세구(1985),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의 교육과정 구성”, 한국국민윤리학회, 「국민윤리교육과의 교육과정과 이념교육」, 1985.12.12~12.14. 아카데미하우스.
- _____ (1997), 「제7차 초·중·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연구」, 서울대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 1997.10.
- _____ (1998), “중등학교 ‘윤리’ 과목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학 관련학과 확대와 기본이수과목 개정방향”, 한국교육과정학회, 「교육과정연구」, Vol. 16. No. 2. pp.401~424.
- _____ (2003),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개선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학회,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방식의 개선방안탐색」, 2003년도 학술세미나자료집.
- 한승조(1980), 「국민윤리교육의 회고와 전망」, 국민윤리교육연구회, 하계세미나 발표자료.
- 한승조, 박용현, 강성위, 이준구, 이병진(1984), 「대학모형교육과정개발연구」
- Mehlinger, Howard & Chung, Sae-gu(1981), 「UNESCO Handbook for Teaching of Social Studies」, UNESCO Paris.

<Abstract>

The Establishment of Interdisciplinary Approach for the Secondary Moral and Ethics Education in Korea

Chung, Sae-gu*

The secondary school subject of moral and ethics education in Korea, since it's entering into the formal courses of study upon the 3rd curriculum amendment in 1975, has paved the way to the establishment of interdisciplinary approach, particularly since the middle of nineteen eigh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much of interdisciplinary characteristics appeared in terms of the teacher training curriculum for moral and ethics education and the selection of required subjects for the acquisition of teacher certificate.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ree main ev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interdisciplinary approach.

First, a nation-wide seminar which was held in 1985 through the attendance of all the professors belonging to the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Education decided the formation of teacher training curriculum that contained three groups of interdisciplinary courses, i.e.,humanity, social science plus ideology problems peculiar to Korean situation.

Second, the ministry of Education notified in 1994 the courses for the acquisition of teacher certificate eligible for the teaching secondary moral education on interdisciplinary principle. The courses included 'Korean Ethical Thought', 'Ethics', 'Theory of Democracy', and 'Education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The first two courses were categorized into the field of humanity and the latter two were categorized into the field of social sciences.

Third, the ministry of Education notified again on interdisciplinary principle in 2000 three groups of the courses for the acquisition of teacher certificate eligible for the teaching secondary moral education. The first group designated one compulsory course named 'Theory of Moral and Ethics Education' in terms of subject matter education area. The second group designated two courses of selection from the five courses of

* Professor,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ity nature including 'General Theory of Ethics', 'Oriental Thought of Ethics', 'Western Thought of Ethics', 'Korean Thought', and 'Reading of Ethics Classic'. The third group designated two courses of selection from the five courses of Social Sciences including 'Theory of Democracy', 'Theory of National Security', 'Theory of National Unification', 'Theory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Moral Psychology'.